

(주)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
(주)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2021. 11. 12.

— 다 음 —

1. 상 호 : (주)비바리퍼블리카
2.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, 내용 등 업무범위
 - (금융서비스 종류) 전자금융
 - (주요 내용)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상품 구매시 결제부족분에 대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
3.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대상
 -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
4.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
 - 선불전자지급수단(토스머니)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시, 결제 부족분을 추후에 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
 - 후불한도는 자체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심사하고,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자별 한도를 차등하여 적용
5.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
 -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

6. 부가조건

① 서비스 제공범위

- ❶ (이용자 한도) 1인당 후불결제 한도를 최대 30만원으로 하고, 대안신용 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할 것
- ❷ (구매품목 범위 제한) 환금성 상품(귀금속, 상품권 등)과 유흥·사행성 관련 업종은 후불로 구매할 수 없도록 할 것
- ❸ (연체시 서비스 제한) 소비자가 연체하는 경우, 후불결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것
- ❹ (카드사 여신과 차별화) 선불결제의 부수기능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준수할 것
 - (1) 이자가 발생하는 할부·리볼빙·현금서비스 등은 하지 말 것
 - (2) '신용', '신용카드' 등 신용카드 결제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쓰지 말 것

② 소비자 보호

- ❶ (후불결제 재원) 후불결제 재원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과 완전히 절연하고,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여 소비자 자금을 두텁게 보호할 것
- ❷ (부정거래 방지) 결제도용, 소위 '깡' 등 후불결제서비스 제공에 따른 다양한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발생할 수 있는 부정거래의 유형을 모니터링할 것
- ❸ (대가 수취 금지) 그 명칭이 무엇이든 후불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금전적 대가(이자, 수수료 등)를 받지 말 것(다만, 연체 이자·수수료는 제외)
- ❹ (약관 반영) 신용정보 조회, 연체 이자율, 채권 회수 절차 등 주요사항*에 대해 약관에 알기 쉽게 반영

* 구매물품 및 가맹점의 범위, 이용한도 및 한도 산정기준, 연체 수수료 부과기준, 신용정보 처리방법 및 절차, 채권회수 절차, 분쟁처리 절차, 후불결제를 이용한 현금유통 행위 금지 등

- 소비자가 후불결제서비스 사용 전 동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할 것

⑤ (연체정보 관리) 다음과 같이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이력부족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것

(1) CB사와의 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 개발·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공유할 것

(2) 후불결제 연체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CB사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, 엄격히 관리할 것

가. 후불결제 연체정보는 금융권, 상거래기업 등의 다른 연체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

나. CB사에 제공되는 후불결제 연체정보를 제3자(금융회사 등)와 공유 제한*

* 통신과금서비스의 연체 및 이력정보도 통신사업자 외에는 연체정보 미제공

다. 후불결제 연체내역이 CB사의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것

⑥ (채권회수 관리 방안) 후불결제서비스 미수금 채권은 매각하지 않고 추심하는 방안(위임추심, 자체 추심직원 등)을 마련할 것

- 채권추심시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법채권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*

* (예시) 금융회사는 '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'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일체의 추심활동을 기록·관리

⑦ (민원처리 절차 마련) 소비자가 후불결제서비스 이용 문의, 분쟁접수 처리 등 민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*할 것

* (예시) 서비스 화면에서 분쟁처리 민원서비스 화면 재배치, 콜센터 전화번호를 안내 등

③ 리스크 관리

① (충여신잔액) 분기별 충여신잔액은 사업자의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20% 이하*로 제한

* 소액후불결제 규모는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최대 50%내로 후불결제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(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, '20.7월)

② (건전성 관리) 자산건전성 분류 운용·기준,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사항은 카드사 신용판매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(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)

- 소액후불결제 이용잔액* 뿐만 아니라 미사용한도**에 대해서도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

* 소비자의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 금액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

** 소비자의 후불결제서비스 한도 중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으로 소비자의 미래 이용에 대비하여 회사가 준비해야 되는 금액

< 업권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>

구 분	정상	요주의	고정	회수의문	추정손실
카드사 신용판매	1.1	40	60	75	100
은행·보험사 가계대출	1	10	20	55	100

4 기타

- 선불전자지급수단(대금결제업)에 대해 후불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체 없이 후불결제업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

7. 지정일 : 2021. 11. 12.

8. 지정기간 : 지정일로부터 1년